

“고려인도 한민족...소비쿠폰 없어도 되지만 서글퍼”

광주 월곡동 고려인마을 가보니

월세 내며 원룸 등 열악한 환경 거주
“외국인이라 못 받는 현실 안타깝다”
“같이 살아가는 우리 존재 기억하길”

“고려인도 같은 피가 흐르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비쿠폰은 안 받아도 되지만 그래도 좀 서글프네요.”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고려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실에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해하지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되면서 고려인들은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지 못한다.

10일 오전 찾은 고려인마을지원센터. 센터 안은 점심을 먹기 위해 모인 고려인들로 가득했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와 이천영 목사는 세심히 관심을 기울이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대화 중에도 이 목사는 본보 10일자에 실린 <“우리 한국인 아닌가요” 소비쿠폰 제외된 고려인 눈물> 기사의 영향으로 고려인마을에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질려온 전화까지 응대하러 매우 분주했다.



10일 고려인마을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이 식탁에 모여 ‘소비쿠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 사이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중앙아시아의 전통 국수요리가 준비됐고 모인 고려인들은 식사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이들은 또 뒤늦게 도착한 이들에게 “즈드랏쓰브이쎌(안녕하세요), ‘즈드랏쓰부이쎌’라며 동포들을 반겼다.

식사를 마치고 둘러앉은 고려인들에게 소비쿠폰에 대한 소식을 물어보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 모두 인터넷과 자녀들로부터 소비쿠폰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소비쿠폰을 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서운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최벨라(75)씨는 “이곳 고려인마을에서 교회를 통해 음식, 생필품 등 지원을 해주지만 소비쿠폰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며 “일을 쉬고 있는

동포들에게는 큰 보탬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실바(73)씨는 “지인을 통해 소비쿠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기대 했었지만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웠다”면서 “평소 어머니에게 같은 피가 흐르는 한민족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긴 채 애정을 갖고 살아왔기에 서운한 감정이 든다”고 실망한 기색

을 보였다.

박스메타(70)씨도 “자녀에게 소비쿠폰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도 받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주변 동포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에르다끼야(77)씨 역시 “소비쿠폰을 받았다면 손주들과 함께 외식할 생각이었다. 대신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겠다”고 웃었다.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일대에는 5000여명의 고려인이 모여 살고 있다. 대부분이 가족들과 함께 월세를 내며 원룸, 투룸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마을의 운영 여건도 녹록지 않다. 정부나 지자체의 공적 지원은 거의 없고, 센터·교육·복지 프로그램 등은 교회 헌금과 민간 후원, 목회비 등으로 근근이 운영되고 있다.

이 목사는 “지금도 적자 상태지만, 어떻게든 자립해보려 발버둥치고 있다”며 “점점 줄어드는 관심 속에 현실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동포들이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면 기뻐했지만 그렇지 못해 아쉬운 건 사실이다”면서 “선조들의 땅에서 같이 살아가는 고려인 동포 모두가 국적을 취득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글·사진=정승우 기자



폭염 나무수목 물공급

해 물주머니를 설치하고 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10일 광주 북구청 공원녹지과 도시녹화팀 직원들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일대 무더위와 폭염으로 인한 가로수 고사 방지를 위

김양배 기자

전남 중·고생 교육수당 확대 ‘속도’

진도군, 첫 확대지급 확정
22개 시군 협력 논의 본격화
교육복지 확대 발판 마련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해 22개 시군과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보성도서관에서 도내 22개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학생교육수당 확대 공동 추진 업무 협의회’를 열고, 수당 확대를 위한 재정 분담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시군이 지역 교육의 공동 주체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교육복지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시행해왔으며, 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22개 시군의 교육복지 및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과 정책 추진 여건을

공유하며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진도군의 선제적 결정이었다. 진도군은도교육청과의 협력 아래 2026년 3월부터 관내 중·고등학생에게도 교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는 기존 초등학생 수당 외에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전국 첫 공식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작은 지역일수록 학생 한 명, 가정 하나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고생 교육수당 확대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교육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진도군의 사례를 시작으로 여건이 마련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수당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군별 협의회를 지속 운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심지숙도교육청 교육자치과장은 “학생교육수당은 교육 기회 보장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전남 21개교에 ‘리박스쿨 교재’ 비치 논란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677곳
여순사건 ‘암세포 제거’ 등 왜곡
김문수 “관련 전수조사·시정조치”

극우 성향 역사교재가 광주·전남 초·중·고교 도서관에도 비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재가 여순사건을 ‘암세포 제거 과정’에 비유하고, 건국절을 주장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0일 열린 국회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리박스쿨의 늘봄강사 양성교육 교재로 활용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677곳에 비치돼 있

다”며 “교육 현장에 극우 역사가관이 은밀히 침투한 사례”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책은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군과 경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을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치료 과정에 비유하는 등 뼈대어린 역사관을 담고 있다. 여순사건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인 전남에서는 이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망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규정하는 뉴라이트식 건국절 주장도 책 안에 담겼으며, 친일 경찰 기용과 사사오입 개헌까지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당한 정치 판단으로 미화했다.

특히 어린이와 부모의 대화를 만화 형식으로 구성한 내용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북한처럼 공산화됐겠조?”

라는 식의 대사가 포함돼 있어, 독자층인 아동·청소년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식을 심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해당 교재는 서울 131권, 경남 94권, 경기 92권, 부산 90권 등 전국 학교 도서관에 비치돼 있으며, 광주·전남에도 총 21권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책은 지역별로 광주 3개교, 전남 18개교에서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광주·전남은 여순사건의 아픔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지역”이라며 “그 역사적 진실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교재가 학교에 버젓이 비치돼 있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가 관련 교재 전수조사와 함께 즉각적인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서 빈집 현금·금반지 훔쳐 달아난 60대 구속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0일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현금 200만원과 금반지 3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가를 배회하던 A씨는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인기척이

없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일, 광주 북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회수한 현금과 금반지를 피해 주민에게 돌려주는 한편, 여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정유철 기자